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나타난 부당사항과 불합리한 요소를 도출·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의료원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23. 1.25.부터 3. 3.까지 27일간 2개반 10명이 참여하여 2019. 3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27건(본처분 27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분요구를 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 발굴한 수범사례 2건은 공개함으로써 산하 전 기관의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감사결과

처분현황			처분요구							
			처분종류(건)				재정상조치(건/천원)		신분상 조치(명)	기관 경고
계	본처분	현지 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	계	추징	훈계· 경고	
27	27	—	27	5	12	10	413	413	11	3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종합감사 결과

[지 적 사 항]

□ 처분요구 목록

(단위: 천원, 명)

연번	분야	제 목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경고	
1	복무	결직 부적정	○○부	주의	-	경고○	-	
2	행정	이사회 구성 부적정	시 ○○○○○○과 ○○처	주의 개선	-	훈계○	-	
3	행정	장례식장 수가운영 부적정	○○처	주의 개선	-	-	-	
4	인사	징계인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처	권고	-	-	-	
5	회계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처	주의 권고	-	-	-	
6	인사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처	개선	-	-	-	
7	기부금품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처	개선	-	-	기관 경고	
8	계약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처	주의	-	경고○	-	
9	계약	하자검사 관리에 관한 사항	○○처	-	-	경고○	기관 경고	
10	의료장비	의료장비 심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처	주의	-	경고○	-	
11	건축	부설주차장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 소홀	○○처	시정 주의	-	-	-	
12	보건	진료비 등 감면규정 정비 소홀	○○처	개선	-	-	-	
13	보건	출연금 관리 및 실적보고 소홀	○○처	시정	-	-	-	
14	보건	진료비 감면 입증서류 미비 등 관리 소홀	○○처	주의 개선	-	-	-	
15	회계· 물품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예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시 ○○○○○○과 ○○○○○○지원단	시정 주의	-	-	-	
16	예산· 회계	행사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처 등 5개 부서	시정	-	-	-	
17	예산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처	주의	-	-	-	
18	계약	수탁사무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처 ○○○○○○지원단	시정	추징 413	-	기관 경고	
19	연구	민간 연구과제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	○○부 ○○처	개선	-	-	-	
20	물품	물품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처	주의	-	경고○	-	
21	물품	차량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처	주의 개선	-	-	-	

[일련번호 01]

인 천 광 역 시

경고·주의 요구

제 목 겸직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경고대상자 ○○부 ○○○○ ●●●●

내 용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사규정」 제37조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인천광역시의료원 취업규칙」 제4조제6호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원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의료원 ○○○○ ●●●●는 별도의 겸직 허가없이 2020.11.14.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을 겸직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경고] 겸직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위 대상자 ●●●●를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사규정」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훈계·주의·개선 요구

제 목 이사회 구성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료원

훈계대상자 인천광역시 ○○○○○○○과 ○○○○○○○○ ●●●●

내 용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따라 ①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③조직에 관한 사항, ④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⑤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연도별 이사회 구성현황은 [붙임]과 같다.

1. 이사회 임원 관련규정 미개정

2015. 1.28. 개정 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임원은 원장 1명,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감사 1명으로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법률」이 개정된지 감사일 현재까지 약 8년여 동안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상 임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2022.11.23.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후 2023. 2.20. 개정·공포하였다.

2. 인천광역시의료원 정관 개정 부적정 및 이사 초과 임명

2015. 1.28. 개정 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단체 추천 및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병원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이사 구성기준을 확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7조를 2018.12.26. 개정하였다.

한편, 2018.12.10. 제정 된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호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이사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2명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8.12.26. 개정된 인천광역시의료원 「정관」 제7조에는 근로자이사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과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정관」 상에 근로자이사에 대해 별도 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9.7.31. “인천광역시 의료원 이사 임명계획”을 수립하고, 이사 모집 및 추천 등의 절차를 통하여 임원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자와 인천광역시 당연직, 시의회 및 추천 보건소장 등을 포함하여 2019. 9.26. 이사(비상임) 승인 내부결재를 득한 후 2019. 9.26. 인천광역시 의료원에 통보하여 2019. 9.27. 근로자이사 2명이 포함된 신규 이사 10명을 임명하여 결국 기존의 이사를 포함하여 총13명의 이사가 선임되어 「법률」에서 정한 이사의 수를 초과하여 이사를 임명하였다.

3. 당연직 이사 미 선임

인천광역시의료원 舊(2018.12.26. 개정 전) 「정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상근 이사는 의료원 진료부원장과 행정부원장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2019. 9.27.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를 초과하여 이사를 임명한 결과 인천의료원 당연직 상근이사였던 행정부원장 이○○ 퇴임(2020. 6.30.) 후 후임 행정

부원장이 취임하여 「정관」상 당연직 상근이사로 임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 및 「정관」상 이사의 수 초과로 이사로 임명하지 아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과장은

[훈 계] 인천광역시의료원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한 위 대상자 ●●●●을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 합니다.

[주 의] ① 향후 법률 등이 개정되는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된 법령 등에 맞도록 즉시 개정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이사 승인시 관련 규정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주의] 향후 이사 선임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선임 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이사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도별 이사회 구성현황 : 생략

인 천 광 역 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장례식장 수가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장례식장 수가운영위원회의 결정(서면결정)을 통하여 [표]와 같이 요금을 변경(신설)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붙임] “장례식장 수가 변경내역”과 같다.

[표] 장례식장 수가운영위원회 개최 및 수가 변경현황

(단위: 품목)

변경 등 일자	계	변 경	신 설	비 고
계	26	21	5	
2020. 3. 9.	9	6	3	
2022. 4. 1.	17	15	2	

※ 자료: 인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1. 근거없는 장례식장 수가운영위원회 운영

「인천광역시의료원 장례식장운영실 관리운영규정」 상에는 시설사용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시설사용료 외에 식음료 및 소모품 판매금액 등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수가운영위원회”를 거쳐 판매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장례식장 수가운영위원회”는 인천의료원 자체 규정

등에 규정된 바 없는 근거없는 위원회로 근거없는 위원회에서 의료원의 중요 수가를 결정하고 있다.

2. 장례식장 수가 변경(신설) 이사회 미의결

인천광역시의료원 「의료수가관리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입원실료(“기존 병실료” 제외), 장례식장 사용료, 구급차 사용료, 제증명 수수료 등의 실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이 따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원에서는 근거없는 “장례식장 수가운영위원회”에서 식음료 및 소모품 판매금액 변경(신설)을 결정(서면결정) 하고, 이사회 의결없이 변경(신설)된 금액으로 수가를 적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주의] 향후 장례식장 사용료, 식음료, 소모품 등 제반 수가를 변경(신설)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변경(신설)된 수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인천광역시의료원 장례식장운영실 관리운영규정」 등 자체 규정을 정비 하여 “장례식장 수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례식장 수가 변경내역 : 생략

인 천 광 역 시

권 고

제 목 징계인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직원의 징계에 한하여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징계위원을 구성하되 행정부원장과 노·사 각각 3명으로 구성한다.”라는 「2019년 산별현장교섭 단체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인사규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와 같이 징계인사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징계위원 구성 및 운영현황 : 생략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제2장제1절에 따르면 “원장은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의료원에 인사위원회를 두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1/4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사규정」 제6조제3항 규정상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징계인사위원을 구성하되, 노·사가 각 3명씩 위촉한 위원과 행정처장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노·사는 외부 징계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징계위원을 7인으로 구성할 경우 최소 2명 이상 외부 징계인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와 같이 내부 직원으로만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권고]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산별현장교섭 단체협약서」를 다시 체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 징계인사위원을 1/4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권고

제 목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인천광역시의료원은(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정관」 제27조(임직원의 보수)는 의료원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수규정」 제28조(시간외 근무수당 등)에 따르면 의료원에서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1. ‘연차보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의료원에서는 「보수규정」 제28조(시간외 근무수당 등) [별표7] 13.연차 보전수당에 근거하여 2004.7.1. 이전 입사자에게는 2005.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최저 1일~최고17일에 이르는 연차보전수당을 [표1] 과 같이 지급하고 있다.

【표1】 ‘연차보전수당’ 지급내역(2020년~2022년) : 생략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에 따른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같은 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25일을 한도로 규정되었으며 부칙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부에서 시달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2003.12.시행)」에서는 “기존의 임금수준”이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 연월차휴가 수당, 생리휴가 수당 등 임금항목별로 별도 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였다.

의료원의 경우 「보수규정」〔별표1〕기본급표의 적용을 받는 직종별 직급 변화가 없었던 자들을 선정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전(2003.7.2. ~ 2004.6.30.)과 개정 후(2004.7.1. ~ 2005.6.30.)의 통상임금총액을 비교해 본 결과 평균 3.06%정도 인상되는 등 임금이 저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2】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 통상임금총액 비교 : 생략

따라서 주 5일 근무제 도입이후 종전에 받던 임금수준이 저하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2021년 기준 출자·출연기관인 인천의료원의 직원 평균연봉과 지방공사·공단 직원의 평균연봉을 비교하여 볼 때 [표3-1] 과 같이 공사·공단 직원의 중위 수준으로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는 바, 근로기준법 개정이후 1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연차수당 감소분을 보전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게다가 ‘연차보전수당’은 2016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수당지급 필요성이 거의 없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급규정 개정(삭제)’를 권고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다.

【표3】 지방공사·공단직원 평균연봉 : 생략

2. ‘위험수당’ 지급 부적정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제5절 수당지급기준에서는 수당지급에 관한 기본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험근무수당’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 특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 편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① 직무의 위험성, ② 상시 종사 여부, ③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일시적·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며, 해당 기관 혹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원에서는 ‘위험수당’을 「보수규정」 제28조 [별표 7]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기준표에 따라 [표1] 과 같이 지급기준을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으로 구분하여 금액만 차등을 두고 사무직 근무자를 포함하는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급여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표2] 와 같이 지급하였다.

【표1】 위험수당 지급기준

지급기준	갑종	을종
금액	60,000원	50,000원
지급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연구. 시험에 종사하는 자 - 결핵.나병.전염병 또는 정신병치료기관에서 수술.치료.검사.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이동 치료 및 특수치료를 종사하는 자 - 전염병 세균 병독 및 독극물 취급하는 자 - 3,300볼트이상의 고압전력을 취급하는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나병.전염병 또는 정신병치료기관에서 직접치료와 간호를 하지 아니하나 상시접촉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되거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자(임시직 포함) - 보일러 장치에 종사하는 자 - 구급차 및 셔틀버스 운전원 - 기타 전직원

【표2】 위험수당 지급내역 : 생략

게다가 2016년 종합감사 시 ‘위험수당 지급은 의료원 근무여건상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자로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권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3. ‘최고호봉 정액수당’ 신설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원 「정관」 및 「보수규정」에서는 의료원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 등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는 2016년부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수당 신설을 지양하고 있으며, 「2023년 지침」Ⅲ.주요항목별 편성기준 1)인건비 (2)수당등에 따르면 수당은 인건비 부족사태 등 방지를 위해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도록 하고 수당신설은 기본급 반영이 어렵고,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법정수당 산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설립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2016. 9.)」 제5절 수당 지급 기준에서도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수당의 지급기준을 지침 및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및 자치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는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승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원에서는 ‘최고호봉 정액수당’이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인천시와 사전 검토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 없이 2021년 단체협약으로 ‘최고호봉 정액수당’을 2022.1.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제192회 이사회(2022.2.22.개최)에서 ‘최고호봉 정액수당’을 신설하여 인천시로부터 승인 [보건정책과-3798호(2022.2.25.)] 을 받고 2022. 1월부터 직급별 최고호봉(만호봉) 대상자에게 [표1] 과 같이 매월 30천 원씩 5개 직종 40명에게 총10,920천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4】 최고호봉 정액수당 지급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권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통상임금 저하가 없음에도, 불합리하게 지급되고 있는 연차보전수당 및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위험수당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연차보전수당은 지급 규정을 폐지하시고, 위험수당은 해당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사전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선 요구

제 목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징계의 효력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르면 ①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고 ②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하며 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경고하고 누우치게 한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48조(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정하고, 같은 규정 제51조(징계의 효력)에 따라 ①파면과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신분을 박탈하고, ②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기본급의 3분의 2를 감하며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본급의 3분의 2를 감하고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처분기간 월평균 보수의 30분의 1의 반액을 감하며 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경고하고 회개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원은 강등과 정직의 처분을 받은 자가 직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음에도 기본급의 일부 및 정근수당 등을 정직기간 중에 3분의 2를 감액하고 지급토록 하고 있어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

2.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관한 사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에서는 직무와의 관련여부에 관계 없이 청렴의무 위반에 관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

【별표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구 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만원 미만	수동	경징계·중징계	강등~감봉	중징계	해임~정직	중징계	파면~강등
	능동	중징계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100만원 이상		중징계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말함							

그러나 의료원에서는 「행동강령」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 제56조(징계양정 및 정상참작) 제1항 [별표5]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의 징계사유에서는 직무관련자만을 징계대상으로 한정하여 징계규칙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징계규칙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징계를 행함에도 의료원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별표5】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파면	해임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			○		
	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능동)		○			
	5)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수동.능동)		○			
	6) 300만원 이상(수동.능동)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능동)		○			
	4) 100만원 이상(수동.능동)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수동)	○				
※ 금품 등 수수액이 소액이라도 2회 이상 및 정기·상습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공금횡령· 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제3호를 준용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개선] 「지방공무원법」 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효력’과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관경고·개선 요구

제 목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관 계 부 서 ○○처

내 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는 인천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기부금품 접수제도 운영 안내」에 따르면 인천시 등은 기부금품법 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 접수가 불가하나,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다.

감염 재난인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단체·개인의 기부 동참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를 인정하며 전국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에 응원의 물품·기부금 등의 후원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의료원 또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표]와 같이 기부금품을 접수하였다.

【표】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 현황 : 생략

1. 기부금 접수액 예산편성 등 미실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 후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원은 연도별 기부금 접수액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료원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9,850천 원의 기부금 수입액 중 5,350천 원에 대하여 기부금품대장에 기재만 한 후 세입예산에 편성 하지 아니하는 등 기부금액 세입·세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2. 기부금 접수절차 미이행

의료원은 2022. 4.14. 기부자로부터 금전 300만 원을 의료원 예수금 계좌(○○○○○-○○○-○○○○○○○○)로 받은 후 직원 격려 포상금 목적으로 원장까지 결재(○○○○○-○○○○○, 2022.12.14.)를 득하여 온** *** 총 300만 원 구입하였다.

의료원은 기부금을 접수할 시에는 지체 없이 접수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상기인으로부터 예수금 계좌로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기부금품 접수대장에 누락하는 등 적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3. 기부금 결산 및 보고 부적정

지방의료원법 제20조에 따르면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료원의 「회계규정」 제148조에 따르면 결산은 당해 연도의 경영 성과와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의료원의 재무 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에 따라 기부금수익은 의료외수익으로 구분하고 연도 내 발생한 모든 기부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료원은 연도별 발생한 기부금 수입 중 5,350천 원을 결산에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등 기부금 결산 및 보고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자체 접수 절차를 통하여 지정기탁금품을 접수 할 수 있으나, 지방의료원 기부금품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원 또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 규정이 전무하여 수불대장 관리 미흡으로 사적 사용 등 부적절한 기부금품 사용의 우려가 있는바 기부금품 접수·관리·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따라서 의료원은 기부금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기부금품의 사용범위 및 사용기준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기부금 접수액은 지체없이 세입 조치하는 등 기부금 접수와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기관경고]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사후관리 등 일련의 절차를 소홀히 하여 기부금품의 부당사용, 목적외 사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엄중 경고**하오니, 향후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자체 세부지침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경고·주의 요구

제 목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경 고 대 상 자 ○○처 ●●6급 ●●●●

○○처 ●●6급 ●●●●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회계규정」 제166조(계약)에 따르면 의료원의 계약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전문공사의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관 내에서 추진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 가능한 건설업 등록 업체와 그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의료원은 공사 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 중 관련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표] 와 같이 2건(36,076천 원)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현황 : 생략

의료원은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당한 건설업자의 계약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경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위 대상자 ●●●, ●●●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사규정」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관경고·경고 요구

제 목 하자검사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경고대상자	○○처	●●●5급	●●●●
	○○처	●●●7급	●●●●
	○○처	●●●5급	●●●●
	○○처	●●●6급	●●●●
	○○처	●●●6급	●●●●

내 용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회계규정」 제166조(계약)에 따르면 의료원의 계약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제13장 제10절 “3”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이하 “정기하자검사”라 한다)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이하 “하자만료검사”라 한다)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 상대방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 또는 하자검사를 위임받은 검사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이 정해진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따로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기간 중 하자검사 실시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의료원의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하자검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해당부서에 정기하자검사 실시 통보 문서만 시행하였으며, 하자검사 결과보고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의료원 계약담당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자검사 대상 총 252건에 대하여 연 2회 정기 하자 검사를 [표1] 과 같이 209건 미실시한 사실이 있다.

【표1】 정기하자검사 미실시 현황 : 생략

아울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공사·물품 계약 10건 중 [표2] 와 같이 9건은 하자만료검사를 미실시 하였다.

【표2】 공사계약 최종검사 실시 현황 : 생략

이처럼 계약담당자가 하자검사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검사를 통해 발견될 수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불안전 요소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이 실시되지 않았고 발견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할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의료원은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종합감사」 당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정기하자검사 대상 일체인 14건을 미 실시 하였으며, 하자만료검사 일체인 15건을 미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의·시정 요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의료원은 상기와 같이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의·시정 요구’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관행적으로 정기하자검사 실시 통보문서만 시행한 후 하자검사를 위임받은 사업부서의 하자검사 미 실시에 따른 독촉 등 하자검사 이행 완료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업무의 전반적인 관리 소홀이 지속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기관경고] 하자검사 업무의 전반적인 관리 부적정이 지속됨에 따라 **엄중 경고** 하오니, 향후 하자검사 업무에 대하여 철차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기하자검사와 하자만료검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하자검사 관리를 소홀히 한 위 대상자 ○○○○, ○○○○, ○○○○, ○○○○, ○○○○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사규정」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경고·주의 요구

제 목 의료장비 심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경고대상자 ○○처 ●●6급 ●●●●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의료장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 운영 및 의료장비 심의, 관리는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장비 심의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장비 심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의료장비의 구매·취득, 활용, 처분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동 지침 제3장(의료장비 심의 세부지침)에 따르면 의료장비별 가격(단가)이 20백만원 이상 장비를 심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의 대상 장비 금액을 20백만 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의료장비는 대부분 수입제품이고, 기능·규격 등이 제각각이어서 관련 지식 없이는 활용 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정당한 가격에 구매하기 어렵고,

활용도가 낮은 장비를 구매하거나 구매 후 장비가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의료장비 구매 심의 기준과 구매 후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필요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시장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그러나, 의료원의 의료장비 구매 및 심의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의료장비별 단가가 20백만 원 이상 장비 총 68건을 구매하면서 [표] 와 같이 총 14건(895,400천 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매하였다.

【표】 의료장비 심의 미이행 현황 : 생략

아울러 의료원은 감사기간 현재까지 의료장비 심의결과를 단 한 차례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경고] 의료장비 심의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위 대상자 ●●●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사규정」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장비 심의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의료장비 심의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부설주차장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주차장법」 제2조(정의)제1호에서 ‘주차장’을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인천의료원 시설 관리팀(이하 “인천의료원”이라 한다.)에서 감사대상 기간 동안 건축한 주차장(이하 “의료원주차장”이라 한다) 개요는 [표 1]과 같다.

【표 1】 의료원주차장 개요

건축(증축)개요		설계용역 개요		건축공사 개요	
대지 위치	인천. *구 **로 217	과업 기간	2019.7.22.~2020. 6.20.	공사 기간	2020. 8. 3.~2021. 9.19.
건축 규모	- 1개동, 연면적 4,502.82㎡, 지 상 6층 (증축) - 148면(일반 116면 확장 32면)	과업 내용	- 옥외주차장 건물 주차장 증축 - 원화(호스피스병동) 확충	공사 내용	- 1개동, 연면적 4,502.82㎡, 지 상 6층 (증축) - 148면(일반 116면 확장 32면)
주차장 구분	부설주차장	준공 일자	2020. 6.20.	준공 일자	2021. 9.19.

※ 자료: 인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같은 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제1항에서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서 법 제6조제1항에서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의 경우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하며, 이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설계용역 및 건축공사 준공 시 부설주차장 연석(경계석) 기준 확인 소홀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제1항제5호에 따라 주차장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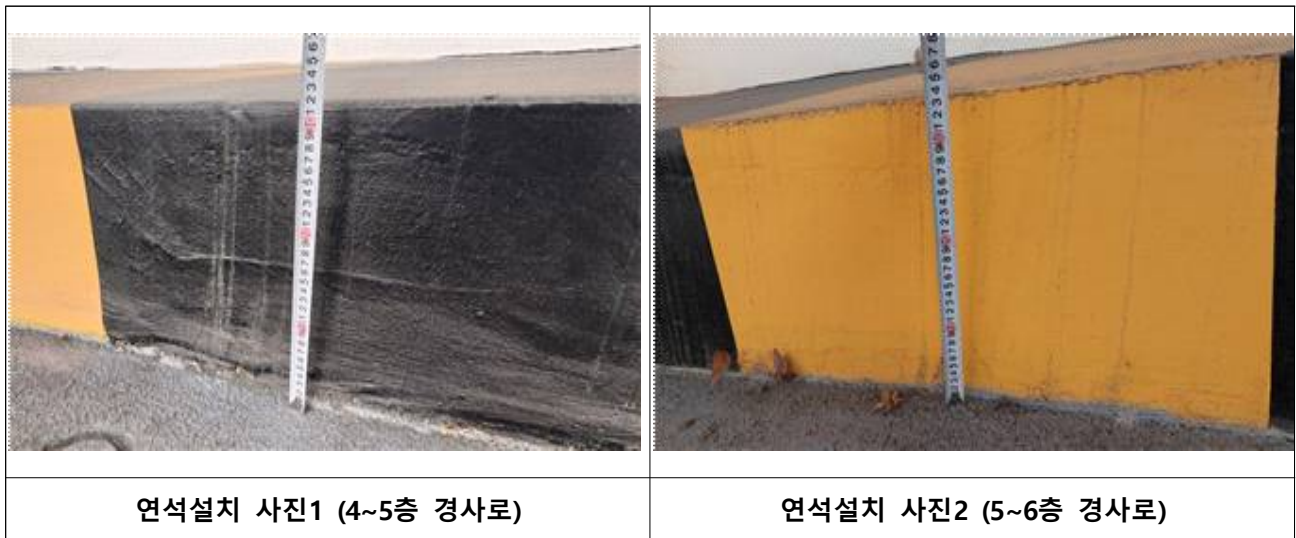
의료원주차장 설계용역 준공도면에서 ‘연석’ 설치에 대하여 양쪽 벽면으로부터의 거리(30센티미터)만 표기하고 높이에 대해서는 표기하지 않았다. 의료원주차장 공사내역서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높이에 대한 기준인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을 초과하여 연석의 규격[너비×높이(단위 mm)]을 300×250으로 (일부) 표기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인천의료원(시설관리팀)은 설계용역 준공검사 시 설계자에게 연석규격(높이) 수정 요구 등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의료원주차장 경사로의 연석 높이를 30센티 이상으로 설치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연석 높이에 대한 기준(10센티 미터 미만)을 위반하였음에도 인천의료원(****팀)에서는 시공자에게 연석 높이 조정이나 재시공 등에 대한 요구

없이 의료원주차장 공사를 준공처리하였다.

인천의료원은 이로 인하여 주차장 연석높이 규정 위반으로 인한 연석과 자동차의 충돌 시 범퍼 파손 등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사진】 의료원주차장 연석 설치 사진



※ 자료: 인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설계용역 시 부설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기준 확인 소홀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이하 ‘추락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국토교통부 고시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제4조(설치위치)에 따라 주차공간 및 경사로의 외벽면 등 차량의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시설을 설계할 때에는 세부지침 제5조(구조안전)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구조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구조계산)를 준용

하여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가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이하 “범용안전 시설”이라 한다)에 해당 하면 같은 지침 제7조(범용안전시설)에 따라 [표 2]의 충돌 조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되 부재의 소성변형 등을 생각하여 충격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2】 범용안전시설 구조설계 기준

충 격 력	충 돌 위 치	충 격 력 의 분 포 폭
250 KN 이상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cm 이상	자동차의 범퍼 폭 160cm 이상

따라서 인천의료원에서는 의료원주차장의 추락방지시설을 범용안전시설로 계획하며 [표 2]의 충돌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의료원은 설계자가 추락방지시설의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구 등의 조치 없이 설계용역을 준공 하여 추락방지 시설의 구조 및 자동차의 추락에 대한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의료원장은

[시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연석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경사로에 설치한 연석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주차장 건축물에 설치한 추락방지시설이 차량 및 구조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검토하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주차장 연석 및 추락방지 시설의 설계 및 설치와 관련한 직원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선 요구

제 목 진료비 등 감면규정 정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관 계 부 서 ○○처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운영지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에 적용할 제7조(사업)에 따른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제3장제3절(진료비 감면 규정) 기본원칙에 따르면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예상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진료비 감면대상을 직원 본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청탁유발 소지가 있는 병원장의 자의적인 특별 감면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5장(기타)제1절(조치사항)에 진료비 감면 기준 및 감면해 주면 안되는 규정 외 감면(예시) 사항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 감면해 주면 안되는 규정 외 감면(예시) >

- 병원장의 자의적인 특별 감면 제도
 - 기타 원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회공익상 필요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의료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인정되는 자
- 임직원 지인(직원 소개 포함)
- 유관기관 직원
- 제대군인(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포함), 자원봉사자, 귀농회원 및 가족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규정에 따라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의안번호 제2012-185호)을 통해 진료비 감면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과다한 감면대상 범위의 축소, 직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축소, 진료비 감면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감독기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등에 권고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 공시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은 2019년~2021년 3년 연속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개별병원 보고서 제2장(운영평가 결과) 1.4책임운영 3)윤리경영부문에서 진료비 감면 기준(15개 항목)중 6개 항목에서 표준운영지침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2. 관계사실

의료원은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진료비 감면과 관련된 내부규정을 검토하여 개정(폐지)했어야 하나, [표1]과 같이 2023년 1월 3일 「진료비감면규정」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개정하고,

[표1] 의료원 「진료비감면규정」 개정 현황 [개정 2023.1.3.]

개정전	개정후
<p>제3조(진료수가 감면) 진료수가를 감면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p> <p>2. 감면대상</p> <p>가. 의료원 직원(이사, 감사, 전공의, 파견근로자 포함) 및 직원의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부모, 친정부모 기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 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 :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 외래 : 진찰료를 전액 감면한다 - 종합건강진단, CT, MRI, 초음파검사, 골밀도 검사를 받을 때에는 진료비의 50%를 감면한다, 단, CT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경우와 CT, MRI 촬영시 조영제는 제외한다 	<p>제3조(진료수가 감면) 진료수가를 감면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p> <p>2. 감면대상</p> <p>가. 의료원 직원(이사, 감사, 전공의, 파견근로자 포함) 및 직원의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부모가 기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 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 :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 외래 : 진찰료를 포함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50% 감면한다. - 종합건강진단을 받을 때에는 진료비의 30%를 감면한다, 단 CT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받는 경우와 CT, MRI 촬영시 조영제 및 치과진료(보철, 임플란트)는 제외한다 - 의료원은 장례식장 이용시 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20%를 감면한다.

※ 자료: 인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청탁유발의 소지가 있는 병원장의 자의적인 특별감면제도에 해당하는 규정은 폐지(삭제)하였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표2]와 같이 「의료수가관리규정」 제7조(제요금의 감면)와 「진료규정」 제52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는 개정하지 아니한 채 감면대상을 ‘사회공익상 필요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국정자문회의 현직의장 및 그 배우자와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의 진료비 감면 규정 기본원칙에 적합하지 않게 규정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2】 병원장의 자의적 특별감면 규정 현황

「의료수가관리규정」 제7조 (제요금의 감면)	「진료규정」 제52조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제7조(제요금의 감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대하여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사회공익상 필요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정자문회의 현직의장 및 그 배우자와 위원	제52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원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법정전염병환자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 자료: 인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개선] 「의료수가관리규정」 제7조 및 「진료규정」 제52조의 병원장의 자의적인 특별감면 규정등을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개정(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출연금 관리 및 실적보고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관 계 부 서 ○○처

내 용

1. 출연금 계좌관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하며, 사업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출자금·출연금 등의 관리)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자·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출연금관리규정」 제12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에 따르면 “의료원은 교부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연기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위하여

출연금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분야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나, [표1]과 같이 인천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을 감사일 현재까지 출연금 별도계좌 없이 통합계좌(****은행 ***-**-*****)로 회계처리 하는 등 출연금 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표1] 출연금 수입예산 현황 : 생략

2. 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소홀

의료원 「출연금관리규정」 제11조(사업의 실적보고)에 따르면 “원장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당해연도에 사업완성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교부받은 출연금에 대한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사업 완료 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표2]와 같이 2019년도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21년에는 3개월 이상 지연 보고하는 등 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출연금 사업 실적보고 현황 : 생략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는 2016년 종합감사, 2019년 종합감사시 출연금 관리 및 실적보고와 관련하여 지적 받은 바 없고, 10여년 동안 출연금 관련 보고는 보건정책과와의 현지점검 계획에 맞추어 보고하였으며, 2019년에 대한 현지점검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시적인 상황으로 보건의료정책과와 긴밀한 협조를 진행 중에 현지점검을 생략한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종합감사 시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지적하지 못한 사항이 향후 종합감사 시 지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의료원 「출연금관리규정」상 사업을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의 실적보고와 정산서를 제출하는 사항은 강행규정으로써 보건정책과의 현지점검 계획에 맞추어 보고 하였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연보고는 일부 참작할 수 있으나, 2019년 사업 정산 미보고, 2020년~2022년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폐쇄 후 짧게는 약 2개월, 길게는 약 6개월씩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시정] ① 출연금 및 보조금의 별도 계좌를 각각 개설하고,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시기 바라며,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진료비 감면 입증서류 미비 등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관 계 부 서 ○○처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및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보건의료관련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사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한다.

의료원에서 징수하는 의료수가 및 제사용 요금을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의료수가관리규정」 제7조(제요금의 감면)에 따르면 “원장은 사회공익상 필요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국정자문회의 현직의장 및 그 배우자와 위원에 대하여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의 승인에 의하되 이에 따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의료원의 진료와 요금수납 절차를 규정한 「진료규정」 제52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에 따르면 “원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법정전염병환자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진료비감면규정」은 직원에게 진료수가 감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이사, 감사, 전공의, 파견근로자 포함)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조(진료수가 감면)제1호에 따르면 “의료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진료를 받은 자, 의료원 직원으로서 업무상 공상환자, 중요 행사에 의료반을 파견하여 일반검사 및 투약을 한 경우 진료수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조(감면대상자 확인 및 통보) 및 제5조(보고)에 따르면 “원무과장은 감면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총무과장은 진료수가 감면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상자 명부를 원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원무과장은 진료비 감면 실적을 매월(입원, 외래)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관계사실

그러나 의료원에서는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제요금 징수를 위하여 진료비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수가관리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원장의 승인에 의하여 처리하였어야 하나, [표1]과 같이 원내에서 발생한 사고 민원환자 및 보호외국인 진료비 감면 40건에 대하여 입증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원장의 승인도 없이 원무팀장 전결로 제요금 감면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1] 2019년~2022년 진료비 감면(사고민원, 보호외국인)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주의] 사고민원 진료비 감면시 「의료수가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제요금 감면 대상자 적정여부 검토하시고 감면대상자에 대한 입증서류를 정확히 구비하여 병원장 승인에 의해 처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보호외국인 감면 처리와 관련하여 입증서류 구비 방안 및 사무전결기준 등을 마련하시어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지원단 예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료원

관 계 부 서 ○○○○○○과, ○○○○○○지원단

내 용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 1. 1.부터 인천광역시로부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1.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2022년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안내」(이하 “사업안내”라 한다) 제3장 업무 절차별 세부지침 8. 사업비 집행 관리·감독에 따라 세목간·비목간 예산 조정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시도 검토의견을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에 공문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승인 신청에 따른 승인 여부 회신 후에 사용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부서는 예산편성 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을 내역사업 등으로 집행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서는 [표1]과 같이 세목간·비목간 예산을 조정하여 사용하며, 사전에 감독부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예산 편성 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등 예산 전용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이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검토하며 별도 조치 없이 정산을 완료하여 매년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 예산 전용 및 사업내역 변경에 대해 승인 없이 사용 후 정산보고한 내역 : 생략

2. 물품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사업안내 제2장 사업 추진방향 3. 지원범위 및 방식에 따라 사업단의 자산 취득이 필요한 경우 국비와 매칭 지방비 사용이 불가하므로 추가 지방비 등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제4장 3. 비목별 세부집행기준 3.2. 운영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에 따라 비품 성격의 컴퓨터, 프린터 등은 추가 편성된 지방비를 활용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 의료원 고정자산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9조에 따라 구입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며, 고정자산이 사업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불용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9. 3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지원단에서는 [표2]와 같이 컴퓨터, 모니터 등 총 16개 품목 94개 물품 25,693천 원의 고정자산을 취득·사용 및 불용 처리하며 관리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2014. 2월에 구입한 모니터 12대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 불용

결정 및 취득승인 절차없이 2021. 11월 불용예정 물품으로 처리하고, 관리감독부서인 ○○○○○○과에서 자산취득비로 승인·교부받지 않은 사업비를 임의로 전용하여 모니터 22대를 구입하였고,

2014. 1월 및 8월에 구입한 컴퓨터 2대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 불용 결정 및 취득승인 절차없이 2022. 3월 불용예정 물품으로 보관 처리하고, 컴퓨터 2대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표2] 지원단의 구매·보유물품 현황 : 생략

3. 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안내 3.2 운영비 다.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는 당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비품·장비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교육 등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또는 물품 등의 임차에 따른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안내 3.3. 여비에 따라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근무지 외 기타 지역 숙박비의 1일 상한액은 50,000원으로 하며, 불요·불급한 출장의 최소화, 비용 절감을 통해 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원단에서는 2022.10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 워크숍 관련 경비를 집행하며, 워크숍 개최 장소가 아닌 숙박용도의 비용은 임차료가 아닌 여비(숙박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표3]과 같이 숙박비를 임차료로 집행하였고, 1인당 상한액에 따른 기준액이 450천 원임에도 750천 원을 초과한 1,200천 원을 집행하였다.

가. 관계기관 의견

지원단에서는 “워크숍 숙소는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공항 및 ■■대병원·■■의료를 고려하여 결정하면서 집행단가를 초과하였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의견에 대한 판단

■대학교 병원 인근에 숙박비 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숙박시설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원단에서 여비를 집행하며 출장비 기준액 검토 및 비용 절감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3]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강화 워크숍 관련 집행단가 초과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과장은

[주의] 향후 사업비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시정] 지원단에서 불용예정물품으로 보관 중인 모니터 12대와 컴퓨터 2대는 이사회 의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물품취득 및 여비집행과 관련하여 규정 및 지침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직무교육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행사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관 계 부 서 ○○처, ○○부, ○○○실, ○○○팀, ○○○○○○실

내 용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의료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집행을 위한 행사비 예산을 총무팀에서 편성하고, 부서별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1. 행사비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022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Ⅱ 주요항목별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이라 한다) ② 경비 나. 세부집행요령 9) 행사·홍보비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2. 일반운영비 2-3 행사운영비에 따라 행사비 예산은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강사료,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등에 집행하며, 기관 또는 부서단위의 체육행사, 기관의 연찬회(워크숍) 경비로는 집행이 불가하다.

그러나, ○○팀에서는 2019. 3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표1]과 같이 행사비

예산을 편성하며 사용목적 및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기관 워크숍, 체육행사, 직무교육 등 총 15개 사업 46건 123,991천 원을 행사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부서에서 관련 예산을 집행하게 하였다.

[표1] 2019년~2023년 행사비 예산 편성 부적정 내역 : 생략

2. 행사비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집행지침 ② 경비 나. 세부집행요령 9) 행사·홍보비 및 집행기준 2. 일반운영비 2-3 행사운영비에 따라 행사비 예산으로는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을 집행할 수 없다.

또한,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비(간식비 포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급식비 단가(8,000원)를 적용하여야 하고, 기관 또는 부서 단위의 체육행사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연찬회(워크숍) 경비(숙박비, 식비, 교통비)로 지급이 불가하다.

그러나, ○○부 등 5개 부서에서는 2019. 3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표2]와 같이 총 12개 사업 34건 63,775천 원의 행사비 예산을 식대·간식비 지출, 기념품·홍보물품 구입, 포상금 지급 등에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표2] 2019년~2022년 행사비 예산 집행 부적정 내역 : 생략

○○○○○○실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붙임2] 예산 과목 및 과목 해소 5.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목·세목)(이하 “과목해소”라 한다) 213 교육훈련비에 따라 각종 교육훈련관련 경비 및 직원의 공공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은 교육훈련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총 2건 244천 원의 관리감독자 직무교육비용을 행사비로 집행하였고,

○○팀에서는 과목해소 217 관서업무비 01 정원가산업무비에 따라 기관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격려, 생일 기념품, 불우 직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는 정원가산업무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내부직원의 체육행사 경비를 행사비 예산으로 총 2건 11,344천원을 집행하였다.

○○부에서는 신입예정 간호사 합격기원 행사비 예산으로 행사실비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회장 구입 및 모바일 쿠폰 지급을 위해 총 2건 1,359천원을 집행하고 행사를 따로 개최하지 않았다.

또한, 신입간호사 OJT 등의 행사비 예산으로 [표3]과 같이 행사 참여 직원들의 식대(간식비 포함)를 집행하며, 집행지침에 따른 급식비 단가(1인당 8천 원)를 따르지 않고 집행기준액 3,112천원에서 5,854천 원을 초과한 총 8,966천 원을 집행하였고,

취업설명회 예산으로는 ‘취업설명회 및 현장견학 관련 회의 행사비’를 내역으로 행사지원 직원의 식대가 아닌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대 총 1건 120천 원을 집행하였고,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않았다.

[표3] 2019년~2022년 행사비 예산 집행 사항 중 급식비 단가 초과 내역 : 생략

○○○○실과 ○○○팀에서는 과목해소 303 포상금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 및 포상품 구입비는 포상금 과목으로 편성된 예산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표4]와 같이 감염관리 주간행사, QI 경진대회 및 행사,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행사비 예산으로 내부 직원들에게 총 7건 10,580천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표4] 2019년~2022년 행사비 예산 집행 사항 중 포상금 지급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시정] 2023년도 예산 중 행사비 편성대상이 아님에도 행사비로 편성되어있는 총 9건 28,591천 원에 대해서는 사용용도와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목·세목을 신설하여 예산 사용 목적에 맞는 과목으로 재편성하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 집행 관련 규정 및 지침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관 계 부 서 ○○처

내 용

1. 예산과목 체계 부적정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I. 2022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 참고 2. 2022년 예산편성지침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그간 목 구분만 있는 출자·출연기관 예산과목 체계를 관, 항, 세항, 목, 세목으로 구분하여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성질별로 분류하여 2022 회계연도부터 전면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2022년도 예산편성부터 관, 항, 세항, 목, 세목의 체계로 예산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의료원에서는 2022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2023년도 본예산까지도 [표1]과 같이 예산서의 예산과목을 관, 항, 세항, 목으로만 구분하여 편성함으로써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개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1] 2022년도 및 2023년도 의료원 예산서 지출예산 편성 사례 : 생략

이에 대하여 의료원에서는 의료원의 재무제표는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지방의료원법 제15조 및 의료법 제62조의 규정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84조)를 적용하여 운영 중이며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가 정한 의료원 결산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작성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에서 회계과목은 예산과목과 많이 상이한 관계로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결산의 어려움이 있어 「2022년,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변경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타 지방의료원과 협력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르면 예산과목과 재무제표 계정과목이 일치하지만은 않아 재무결산에 있어서 지방출자·출연법 및 결산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별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른 결산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과목을 세목까지 구분하여 편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수탁사무에 대한 예산편성 부적정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Ⅱ. 예산편성의 원칙 2. 독립채산의 원칙, 대행사업 등에 따른 비용부담에 따르면 위탁대행 사업비용은 위탁대행사업 수익에 대응한 수입액 범위 내에서 해당비목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6. 기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품목중심 편성방식이 아닌,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하나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어 이해를 쉽게 하도록 성과지향의 사업예산제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지침 [붙임 2] 예산과목 및 과목 해소에 따르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산 기본구조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성되며, 각 예산별 수입·지출과목을 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고, 지출예산과목을 목·세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연기관에서 수탁사업에 대한 지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의 수입액 범위 내에서 해당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료원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9. 3월 이후) 중 수탁사업에 대한 지출예산을 해당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지 않고, [표2]와 같이 각 수탁사업명에 전체 예산액을 편성함으로써, 해당사업을 구성하는 예산과목을 확인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표2] 연도별 수탁사업 예산 편성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주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과목을 세목까지 구분하여 편성하고, 수탁사업에 대한 예산을 비목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관경고·시정 요구

제 목 수탁사무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관 계 부 서 ○○처, ○○○○○○지원단

내 용

1. 의료원 수탁사무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회계규정」 제6조(회계 관계 업무의 위임) 내지 제8조(회계관직의 지정)에 따르면 원장은 회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업무에 관한 사무를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위임할 수 있으며, 계약 기타의 지출 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 원인행위 담당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관은 행정처장으로, 분임계약담당관은 재무회계팀장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같은 규정 제166조(계약)에 따르면 의료원의 계약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기관의 장과 의료원장의 협약에 따른 수탁사무를 수행하며 의료원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재무회계팀장이 분장한 계약유형(공사, 용역 및 물품 등)별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이 관련 사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원에서는 일부 수탁사무 수행에 따른 계약 사무를 의료원의 계약 담당자가 아닌 수탁사무의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추진함으로써 정당한 회계관직을 지정받지 않은 자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입찰(수의견적 공고 포함) 등의 실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수탁사무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충분한 입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없이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보증서 및 선금 지급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서 등을 각서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각서로 대체하여 징구하는 등 [표1]과 같이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표1] 의료원 수탁사무 계약체결 부적정 현황 : 생략

2.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에 따르면 용역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1.3임에도 ○○○○○○지원단에서 2019년도에 추진한 “인천광역시 ○○○○○○지원단 태블로 퍼블릭 대시보드 시스템 구축”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서 제6조(지체상금)에 지연배상금률을 1000분의 2.5로 정하였고,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인 2019. 12. 15.(일)이 지난 2019. 12. 19.(목)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2019. 12. 20.(금)에 검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 412,500원을 [표2]와 같이 징수하지 않았다.

[표2] 수탁사무 계약 건 지연배상금 미징수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기관경고] 수탁사무에 대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며 지방계약법령 및 의료원 회계 규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경고」 하오니,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인천광역시 〇〇〇〇〇〇지원단 태블로 퍼블릭 대시보드 시스템 구축” 계약의 이행 지연과 관련하여 미 징수한 지연배상금 412,500원을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개선 요구

제 목 민간 연구과제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관 계 부 서 ○○부, ○○처

내 용

1. 연구비 사용 기준 준수 필요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따라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2014. 2. 19. 수립하여 감사일 현재(2023.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공립병원 수탁연구비의 관리를 표준화하여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고자 2017. 12월 「국공립병원 연구용역비 운영지침」을 수립하였다.

감사대상기간(2019. 3월 이후) 중 의료원에서는 [표1]과 같이 14건의 민간 의뢰 임상시험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표1] 민간 의뢰 연구과제 수행현황 : 생략

의료원에서는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국책연구사업의 경우에는 「국공립병원 연구용역비 운영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의뢰한 연구과제의 연구비 사용은 민간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항목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공립병원 연구용역비 운영지침」에 따르면 연구비 비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정하며 직접비에 대하여는 [표2]와 같이 8가지 세목으로 구분하여 사용 용도를 정하고 있으나, 의료원에서는 민간 연구과제 연구비 중 직접비는 인건비, 연구활동비, 약제관리비, 기타(여비, 수용비, SMO비 등)로만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를 구분하지 않아 사무용품비 등을 연구활동비로 사용하고 있고, 임상시험(대상자경비 포함)비 등을 기타 경비로 사용하는 등 「국공립병원 연구용역비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직접비 세목별 사용 용도와는 다르게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2] 직접비 세목별 사용용도

세목	사용용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박사후연구원(리서치·펠로우 등)을 포함) -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 시약 및 재료 구입비 - 전산처리·관리비 - S/W 구입(범용성 S/W 제외)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 국외 출장여비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연구과제 추진비의 회의비는 제외),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 논문게재료 및 논문심사비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대상자경비 포함),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 정보DB사용료 등 - 설문조사비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과제 추진비	-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연구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약제관리비	- 연구과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조제, 투약, 관리 및 보관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자료: 보건복지부「국공립병원 연구용역비 운영지침」발췌

따라서 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연구비 사용을 위해서는 민간에서 의뢰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도 과제의 특수성이 있는 일부 항목 등을 제외하고는 「국공립병원 연구용역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2. 참여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관리 미흡

「국공립병원 연구용역비 운영지침」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참여 연구원의 평가 및 인센티브 배분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9조(위원회로서의 권한과 의무)에 따르면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연구계획서 심의 시 공동연구자 및 연구담당자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원에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참여 연구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에 연구계획서 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원이 결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표1]의 민간 의뢰 연구과제 중 셀트리온(주)의 “경증 또는 중등도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 치료와 병행하여 CT-P59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제 2/3상 무작위 배정, 평행군, 위약 대조, 이중눈가림 임상 시험”의 과제 수행에 있어서는 [표3]과 같이 2차 정산(2021.12.9.) 시에는 인건비 지급대상에 박미정 연구원이 추가되었고 3차 정산(2022.11.10.) 시에는 지형애 연구원이 추가되어 감사기간(2023. 1월) 중 이에 대한 연구계획서 변경 신청 및 승인사항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관리가 미흡하였다.

[표3] 참여 연구원 변동사항에 대한 인건비 지급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개선] 민간 연구과제 수행 시에도 「국공립병원 연구용역비 운영지침」 등을 준수
하시고, 연구 참여자 인건비 지급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비 사용의 신뢰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경고·주의 요구

제 목 물품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경고대상자 ○○처 ○○6급 ○○○○

내 용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은 의료원이 관장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적절한 보호를 위해 「고정자산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무 처리는 같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물품 불용처분 업무처리 부적정

의료원은 2019년도에 전산 대장에 등재된 물품 중 [표]와 같이 일부 물품(공기구비품)을 대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각 부서에 물품목록을 통보한 후 실물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취합하여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 2019년 재물조사 실시 결과

(단위: 개)

실시기간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고
		현품	부족품	
'19. 4. 17. ~ 5. 10.	공기구비품 (3,190개)*	3,016개	174개	불용대상 물품 발생 (수량 미상)

* 관리과 등 13개 부서 조사(실제 자산 유·무 확인)

※ 자료: 인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의료원은 대장과 비교하여 실물로 확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정자산

관리규정」 제35조(망실, 훼손)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대장에 미등재된 누락자산을 발견한 때에는 같은 규정 제21조(누락자산의 처리)에 따라 그 원인을 조사하고 고정자산에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이 용도 및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필요가 없을 시에는 「고정자산 관리규정」 제29조(불용결정), 제30조(불용결정 절차의 선행)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불용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각·양여·교환·철거·폐기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불용결정 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표]와 같이 재물조사 결과, 대장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부족품(174개)과 불용품(수량 미상)이 확인되었음에도 부족목록 등재 및 손망실 처리, 불용목록 작성 등 재물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부족품을 불용품으로 보고하였으며,

해당 불용품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사항(불용결정)이 누락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의 확인도 없이 해당 불용품을 폐기 처분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2. 물품 수급관리계획 미수립 및 재물조사 미실시

의료원은 「고정자산 관리규정」 제37조(물품 수급관리 계획 수립)에 따라 물품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매 사업연도마다 고정자산 출납담당으로 하여금 물품 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고정자산 관리규정」 제34조(자산의 실사)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현물과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의 경우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의 연간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구매를 억제하고 필요한 물품을 계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의료원에서는 2019년도 종합감사에서 물품 수급관리계획 미수립에 대해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립해야 하는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2020년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수립하지 않는 등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2020년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 전반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의료원의 물품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경고]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위 대상자 ○○○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사규정」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물품의 관리 및 처분 등에 있어서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직원 직무교육 등을 통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차량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은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광역시의료원 관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관용차량 관리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차량 정수 관리 미흡 및 관련 규정 미비

「관용차량 관리규칙」에는 차량을 차종·차형 등으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기 위해 차량 정수배정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으나,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중 의료원이 구입한 차량 관련 사무를 확인 결과, 차량 구입 시 정수 관리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의료원 차량 구입 현황 : 생략

임차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은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 정수 등을 고려하여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작성대상으로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정수관리 대상물품이 정수를 초과하여 구매되는 사례를 지양하고 정수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급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에 따라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에 따라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등 차량의 적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5조(배정요청) 및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에 따르면 차량 구입이 필요한 부서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해야 하고, 차량 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원은 차량의 구입과 관련된 사항을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차량의 정수배정 및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편성된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등 차량 정수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하였다.

이에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살펴본바, 차량의 기준정수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제한하는 등 정수배정 절차를 규정에 따라 이행하기 불가능하였으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차량의 구분 등) 별지 제1호의 관용차량 현황 목록에는 규칙 제정 이후 구입한 8대의 차량은 반영되지 않아 현재 현황과 불일치하는 등 규정과 관련된 미비점이 다수 확인되었다.

2. 차량 운행일지 작성 관리 소홀

의료원은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5조(차량 집중 관리부서 지정) 및 제16조(차량 관리방법), 제20조(유류사용 정산), 제21조(기록관리), 제24조(운전원의 의무 등) 등의 규정을 두고 차량 운행 및 점검과 관련한 기록을 차량 운행일지를 통해 작성하고 차량배차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 중 작성된 차량 운행일지에는 유류사용 정산에 필요한 사항인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유류잔량,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 등 운행 관리와 관련하여 필히 작성되어야 하는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차량 운행일지 작성 관리에 소홀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주의]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직원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의 정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 기준정수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종합감사 결과

[수 범 사 례]

수범사례1 국가 재난 비상상황(코로나19) 선제적 대응

□ 현 황(추진배경)

- 지역사회 감염병전파 차단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사업 적극 기여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병상 부족 등 의료지원 과부하 해소 및 환자의 효율적 관리

□ 주요내용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및 운영(~2022.12.16. 기준)

내 용	실 적
코로나19 입원환자 치료	4,813명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간호인력)	14,545명
선별진료소 운영	29,691명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기관별 네트워크 구축 및 각종 지원
 -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 현장방문을 통한 감염관리 현장코칭지원
 - 코로나19 임상증례 교육 및 재택치료 의료진 교육 등 외부 강의 지원
 -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공무원 시험 등 코로나19 수험생 시험장소 제공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팀 운영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운영기간 : 2021.10.20. ~ 2022.07.15.

등록환자	약처방	비대면 진료	정신건강 의뢰	본원 병상배정	타병원 병상배정	생활 치료센터
18,155	5,577	6,548	30	765	158	296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인천공항 무인발급 서비스 체계 구축
 -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발급 목적 방문자 증가로 선별진료소 혼잡, 감염위험 노출, 행정력 소모 등 감소를 위해 인천공항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무인발급서비스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인천시민의 감염병 예방 관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 충실 이행
- 정책방향 및 의료원 과제에 맞는 구체화 방안 도출을 통해 발생 개연성 있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관련사진

		
<p>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p>	<p>코로나19 입원환자 치료</p>	<p>재택치료팀 운영</p>

수범사례2 환자경험평가 공공의료기관 중 1위

□ 현 황(추진배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 전국 (상급)종합병원 대상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입원경험 수집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에 기여

□ 주요내용

- 환자경험평가 대비 TFT 구성 및 운영
 - (현황분석) 2019~2020년 운영평가 환자경험조사 결과를 통한 문제점 분석
 - (TFT구성) 진료, 간호, 환경·기타서비스 영역별 TF 구성 및 전략계획 수립
 - (교육 및 홍보) 환자경험평가 관련 전직원 교육 및 홍보
 - (자체조사 및 모니터링) 입원환자 대상 환자경험평가 자체조사 실시 및 월별 모니터링·개선활동 실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3차 환자경험평가 실시
 - (대상기관) 전체 (상급)종합병원 359개소
 - (대상환자) 만19세 이상 성인으로 1일 이상 의과입원환자 본인 (낮병동, 완화병동, 소아, 정신, 코로나29 환자 제외)
 - (평가도구) 환자경험 6개 영역, 개인특성 등 24개 문항 구성
 - (최종결과) 전국 5위, 공공의료기관 중 1위

구분	영역별 점수					
	의사영역	간호사영역	투약 및 치료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
평균	81.72점	86.38점	82.30점	82.82점	78.77점	82.26점
의료원점수	88.18점	90.27점	87.96점	91.14점	85.15점	91.75점

□ 기대효과

- 적극적 환자경험관리를 통한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
- 환자중심 환경으로 긍정적인 의료원 이미지 고취

□ 관련 사진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일반

요양기관명	인천광역시의료원		
요양기관번호	31100015		
종별	종합병원	평가항목	환자경험
평가차수	1차	평가대상기간	2021.05~2021.11
통보일자	2022.07.22	담당부서	정보수집체계개선부
결과발령일	2022.07.22	구분	원평가
전화번호	033-739-4538, 3681~3683		
주소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		

평가결과 안내

귀원의 우수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 확산과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5~11월 동안 2021년(3차) 환자경험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환자경험(Patient Experience) 평가는 진료와 얼마나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한 것으로, 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환자중심성(Patient-centeredness)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환자중심 의료란 환자 개인의 선호·필요와 가치를 존중하고 이에 상응하는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모든 임상적 의사결정에 환자의 가치가 반영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환자경험 평가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4개 문항을 활용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귀원의 평가결과와 함께 비교지표를 제공하오니 귀원의 질 향상 활동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 바랍니다.

귀원의 평가결과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평가항목(환자경험)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수집체계개선단 정보수집체계개선부 ☎033-739-4538, 3681~3683

2022.07.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인 천 광 역 시 의 료 원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2021년(3차) 환자경험 평가 결과 안내

1. 관련근거: 정보수집체계개선부-240(2022.7.21.)
2. 「2021년(3차) 환자경험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증별·지역별 점수 (단위: 점)

평가항목	본원 점수	동일종별 평균	동일지역 평균
간호사	90.27	85.60	85.99
의사	88.18	81.27	81.15
투약 및 치료과정	87.95	81.48	81.67
병원환경	91.14	81.72	82.60
환자권리보장	85.15	75.21	75.20
전반적 평가	91.75	81.18	81.05

붙임 1. 2021년(3차) 환자경험 평가결과와 홍보·공문
2. 환자경험평가(2021년) 결과.

환자경험평가 결과 안내

인천의료원, '환자경험평가' 전국 359개 의료기관 중 5위

안전한 진료환경 갖춘 의료기관으로 평가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승인 2022-08-07 10:03 주관필 기자

인천 중부권 지역사회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인천의료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3차 환자경험평가에서 전국 359개 의료기관 중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7년부터 인원서비스의 질을 파악하고 환자중심의 의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일원해 있는 환자 개인의 선호, 필요와 가치를 존중하고 이에 상응하는 진료를 제공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경험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3차 평가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유선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민 5만8297명을 대상으로 ▲간호사 영역 ▲의사 영역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 보장 ▲전반적 평가 등 6개 항목에 걸쳐 실시됐으며 인천의료원은 전체평균 89.08점을 획득해 평가에 참여한 359개 의료기관 중 전체 5위를 달성했다.

인천의료원, 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1위'

심평원 전국 359개 의료기관 평가 시행 인천의료원 5위에 당당히 이름 올리

입력 2022-08-05 14:13

연관검색어 **인천의료원 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1위'**

인천의료원 의료진이 환자를 대하고 있다. 인천의료원 제공

인천 중부권 지역사회의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인천의료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3차 환자경험평가에서 전국 359개 의료기관 중 당당히 5위에 이름을 올리 화제가 되고 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중에서는 단연 1위다.

환자경험평가 전국 5위, 공공의료기관 중 1위 보도자료